

野 보이콧 선언에도...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하겠다”

검찰, 민주당 중앙당사 2차 압수수색 시도... 오전 국감 파행 민주, 대장동 특검·야당 탄압 사과 요구... “시정연설 수용 못 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가 '대장동 특검' 공방 등으로 국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에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 수용과 윤 대통령의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며,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는 정상적으로 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결의했다”라며 “막말을 포함해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을 향한 부당한 행태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만 어떻게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일축하면서 시정연설 보이콧 움직임을 “국민 협박”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직접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는 형식도 내부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연단에서 쪽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사실상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2차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민주당이 반발, 오전 국감이 파행하는 등 여야 대치 국면이 가팔라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대장동 특검과 시정연설 보이콧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 책무라고 강조하며 야당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또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특검 수용 여

부를 시정연설 전까지 답변하라고 요구한데 대해선 “여야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차단막을 쳤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에게 (특검에 대한 입장을) 답하라고 하는 건 대통령실이 마치 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며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수용 및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국회의법의 규정이고, 여야 합의로 (시정연설이) 25일로 일정 정해졌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야당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국회법과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시정연설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거론하면서 “쌍특검” 가능성도 내비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감, 파행 뒤 속개 24일 오전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이날 오후 속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탄압 규탄한다!' 팻말을, 국민의힘은 '부패척결 민생국감' 팻말을 각각 자리에 붙이고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달라진 입지

6월 지방선거 이후 광주서 1000여명 입당... 젊은층·남구 중심 급증

최근 광주에서 500여 명이 국민의힘에 무더기 입당하는 등 광주지역에서 국민의힘 '입당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남구 봉선동 등지를 중심으로 보수정당 호남 역대 최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한 뒤 이 지역 정가에서도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타 지역구 국회의원을 광주·전남에 배치하는 '호남 제2지역구 정책' 등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도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1000여명이 입당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입당자가 400여명에

이르고, 최근 남구에서 500여명이 입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보 선정 등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신규 당원이 늘어나는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신규 당원이 급증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또 특정 정치인들이 세력을 형성해 가면서 신규 당원 입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지방선거에 구청장과 시의원에 입후보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당원 모집에 나서면서 신규 당원이 급증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면서 '민주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광주에서도 보수세력이 결집을 하고 있다”면서 “잇단 선거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남구에서의 신규 당원 입당 러시는 당 차원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와 이정현 전남도지사 후보가 각각 15.90%와 18.81%의 득표율로 보수정당 사상 역대 최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선전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광주에서 12.7%를 득표했지만, 남구에서는 13.4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남구 봉선2동에서는 광주 전체 득표의 2배 가량인 21.87%를 득표했으며, 남구 봉선2동 한 투표소에서는 4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최근 '남구의 무더기 신규 입당'에 고무된 분위기다.

이 때문에 최근 광주지역 국민의힘 신규 당원 붐물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후보 효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은 “(광주 지역 입당자가 늘어난 것은) 21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호남과의 동행'을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가고 있고, 입법과 정책 등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정부 무능 지적·지방분권 대책 제시

재정분권 3단계 추진 등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복구)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매섭게 추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96억원이던 된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지금까지 2000억원을 상회했고, 정부 각 부처 예산을 무리하게 끌어다 쓰고 있다며 질타했다. 또 국감장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외교감사' 영상을 보여주면서 거짓말과 언론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 수사개시범위 확대에 대한 경찰의 반대입장을 명기한 공문을 단독 입수해 제시했음에도 “경



찰은 반대한 적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태를 성토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감장에서 이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종부세 완화 등으로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자갑세를 철폐하고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소방청 국감에선 소방관들이 사용기한이 지난 낡은 보호복을 입고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 및 사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면서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형배, 지역현안 해결 정책국감 ‘호평’

청소년 금융 교육 보고서 등 발간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산)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국감을 펼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 의원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 참여의 의미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및 광주교육청 신축 이전 등 광주지역 교육현안 해소 방안 ▲청소년 금융교육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등 3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을 통해 정책국감을 실현했다는 분석이다.

민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수 감소 추세와 달리 광산군은 2037년까지 인구수 38만명, 학생수가 5만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 통계를 제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민과 학부모의 요구, 도농복합 행정지원의 특수성



과 타시도와의 경쟁성 등을 고려할 때, 1988년 광산군의 광주직할시 편입으로 없어진 광산교육청이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 의원은 광주교육지원청에는 광산군 학생들의 타지 치구 배정에 따른 원거리 통학문제, 수원지구 과밀학급 등 지역교육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지원청 부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정선 교육감으로부터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전남대 국감에서는 새병원의 빠른 건설을 통해 광주·전남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예산 지원확대를 교육부에 주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